

신담보 ‘장밋빛 손해율’ 막는다… 보험사 ‘CSM 경쟁’ 새판

금융당국, 보험부채 과소평가 방지
6월 말 결산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신계약 예상 미래이익 줄어들 수도
보험료·CSM 변화시점은 하반기

앞으로 보험사가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 위험담보의 미래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잡기 어려워진다.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신담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험계약마진(CSM)이 줄어들 수 있어 보험사의 상품 판매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말 결산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요율에 약 10%의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해당 담보를 포괄하는 상위담보의 실적손해율 가운데 높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간편고지 유형은 보험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늦출 수 있다.

◆ CSM·보험료 조정 가능성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담보에 유사 담보의 손해율을 적용



Chat GPT가 생성한 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이미지.

하거나 자체적으로 낮은 가정을 사용했다. 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장래 보험금 지급액이 적게 예상돼 보험부채는 줄고 미래이익인 CSM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고,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담보를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손해율 가정이 높아지면 같은 규모의 신계약을 판매하더라도 계약 한 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미래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보유계약도 미래 현금흐름 재평가에 따

라 CSM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같은 폭으로 즉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손해율과 상품 포트폴리오, 남아 있는 CSM 규모가 달라 회사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보험사의 대응도 보험료 인상과 보장한도 축소, 지급조건·인수기준 조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보장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손해율 가정이 낮았던 회사는 신규 담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기존에 적용해 온 손해율이 달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CSM 총량이 바뀌면서 미래 수익성이 재평가되고, 일부 회사는 신규 담보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자체는 2분기 결산부터 반영되지만 실제 보험료나 CSM 변화가 실적에 나타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계리 역량이 승부처

사업비 가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장래 계약관리비 등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여러 상품과 부서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실제 발생기간에 맞춰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한다.

미래 보험금과 계약 유지·관리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신담보의 예상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독립보험대리점(GA) 수수료와 사책을 포함한 판매비 집행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계리가정 변경이 곧바로 수수료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간 통계·계리 역량의 격차도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점검에서 한 보험

사의 손해율 산출단위는 1100여개였지만 다른 보험사는 41개에 그쳤다. 연령과 성별, 직업 등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계약과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손해율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이유다.

데이터가 많다고 신규 담보에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험통계가 쌓인 이후 실제 손해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 보험료와 보장구조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상품 수익성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간편고지 보험은 적용을 연말까지 늦출 수 있어 영향도 단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일반 신담보는 반기 결산부터, 유병자 대상 간편보험은 연말 결산부터 CSM과 상품 수익성 재평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기존에 적용해 온 손해율이 달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CSM 총량이 바뀌면서 미래 수익성이 재평가되고, 일부 회사는 신규 담보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가계대출 규제·홍콩 ELS 등 국감 달군다

2026 금융위 국감 주요쟁점
대출규제, 실수요자 혼란 키워 논란
홍콩ELS 과징금 대폭 축소 ‘화두’
레버리지ETF·금융사고 질의 예상

다음달 열리는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고위험 금융상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안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적정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감액,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꼽혔다.

대출 규제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과도하게 막고 있는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13일 이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도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감에서는 이처럼 대출 규제 기조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운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총 38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액을 넘어섰다.

홍콩H지수 ELS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당초 4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과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은행의 자율배상 노력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한 위반



국회 정부위원회가 지난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기관들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시스

이라는 점 등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감경 근거가 타당했는지와 함께 불안전판매 과정에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경영진의 책임을 충분히 물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에만 허용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내외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주가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두 달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 발동됐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에 앞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은행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

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 2000만원으로 늘었다.

사고 유형도 임직원 횡령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와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등 외부인 사기, 해외 점포 사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위 직접 피감기관인 IBK 기업은행에서도 중국법인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은행과 금융지주에 책무 구조도가 시행된 이후인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이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감에서는 개별 금융사고의 발생 경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책무구조도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금융사고까지 금융당국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국 8개 단지서 주간 분양 3641가구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1927가구

인천 계양3기 신도시 본청약을 비롯해 경기 광명, 부산 예코델타시티 등 주요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단지의 분양이 시작된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36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1927가구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티프라디움에듀하임’, 경남 진주시 판문동 ‘진주 판문지구레이크씨밋웰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금강센터리움에코리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주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한 곳도 없다.

광명시티프라디움에듀하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6가구 규모다. 이케아, 코

스트코, AK플라자, 중앙대 광명병원 등 광명역세권 인프라가 인접해 있다. 1호선과 KTX를 비롯해 평택과주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단지 앞 밝은빛유치원, 서면초, 안서중, 창의경영고가 위치하며 소하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가 들어서는 구름산지구는 계획형 주거지로 조성 중이며, 향후 시티프라디움 브랜드타운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진주판문지구레이크씨밋웰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전용면적 78~182㎡, 총 690가구 규모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IC가 가까워 진주 도심과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평거초를 도보통학 할 수 있고 경해여중·고, 선명여고, 평거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진양호공원, 판문천수변공원, 남강, 평거시장 등이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리풀1지구 2028 하반기 착공 ‘속도전’

LH, 패스트트랙 적용… 물량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리풀1지구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초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공급 물량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LH는 내년 3월 서리풀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LH는 지구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주택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안하가와 보성, 공사 등 모든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토지와

건물 등 보상 대상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LH는 당초 발표한 물량보다 500가구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성훈 LH 사장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릴 것을 주문함에 따라 소음기준 완화와 국방부 협의 등을 통해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리풀 지구에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신설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성채리 기자 cr56@